

날아간 항공업계 빅딜... 인력감축·구조조정 본격화

이스타, 오늘 정리해고자 명단 발표
지난달 91명 직원 희망퇴직 신청
아시아나, 인수 무산 공식화 전망
산은 등 채권단, '플랜B' 준비 중



아시아나항공(위)과 이스타항공 항공기.

항공업계 '빅딜'로 꼽히던 두 M&A가 결국 모두 무산되면서, 곧 대대적인 인력감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7일부터 본격적인 정리해고에 들어간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됨에 따라 재매각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체 직원 1680명 중 절반 가량인 700여 명을 감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미 지난달 31일까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총 91명의 직원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초 구조조정안에서 나머지 600여 명이 정리해고

자 명단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해고자 명단 발표 계획에 대해 "그대로 진행한다"며 "(근로자 대표 및 노조와) 얘기는 다 끝났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정리해고자 명단을 발

표한 뒤 내달 6일 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항공기 6대 운항에 필요한 420여 명으로 조직을 슬림화해, 재매각 준비에 나선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는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10월 중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업계에 따르면 대형 펀드와 기업 3~4곳 등이 투자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노딜'이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나항공도 향후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시아나 인수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일 이메일을 통해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인수가격 재조정 등 이동결산은 회장의 최종 제안에 답한 것이다.

그러나 현안이 결국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시아나 M&A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미 산은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에 기간산업안정 기금 약 2조원 가량을 지원하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자금 지원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며 "유동성 지원과 별개로 HDC현대산업개발 관련 계약해지 여부는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아시아나가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로 들어갈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감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다. 앞서 아시아나는 2010년 산은 주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4년 자율협약을 졸업한 바 있다.

이번 기간자금 지원 등으로 아시아나가 다시 6년 만에 채권단 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9079명(지난 6월말 기준)에 달하는 아시아나 전 직원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수 있다. 다만, 채권단은 이미 아시아나의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 약 37%의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채권단 관리 체제로 들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구조조정보다 왜 아시아나가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부실해졌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다. 부실화 원인을 체계적으로 찾아, 하나하나 대안을 찾는 것에서 경영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영 회복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회복이 되면 매물로 내놔도 자연스럽게 매수자가 나올 것이다.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드러내놓고 하면, 당장 조직 내부의 저항이 클 것"이라며 "일단 일자리를 지켜야 해 정부도 부담이 되니,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글로벌 기업 64%, 공급망 새판 움직임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 원인
중국, 가치사슬 재편 가장 활발
신흥시장별 자체 공급망 강화 등

코트라가 세계 49개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글로벌 기업 중 64%가 사업장 이전 등 '공급망 재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아세안 등 신흥시장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분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것이다.

코트라는 지난 6~8월 사이 49개 해외 무역관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코트라는 글로벌 기업 246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장 이전, 조달처 변경, 투자·인수합병 등을 분석했다.

가치사슬 재편이 활발한 지역은 중국(45%), 북미(35%), 중남미(35%) 순이며 활동은 기업 간 투자·인수합병이 가

장 비중이 컸다. 그 이유로는 보호 무역주의 심화(27%), 기술 고부가가치화(26%), 신중국 소비시장 활용(26%) 등을 주로 꼽았다. 코로나19 확산 대응(20%)과 관련된 사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코트라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양상이 ▲ 신흥시장별 자체 공급망 강화 ▲ 중국을 둘러싼 새로운 가치사슬 형성 ▲ 기업 간 투자·제휴 활성화 등 3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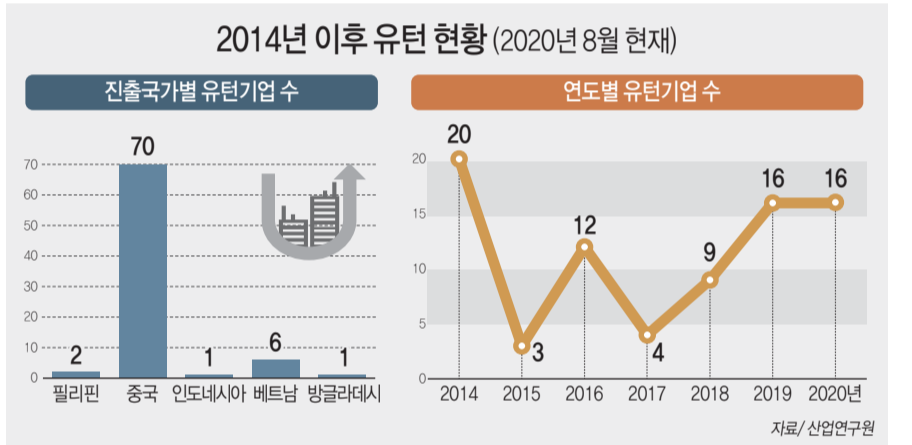
즉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부품 조달과 제품생산, 판매·유통을 현지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체 완결형 공급망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기·전자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생산라인을 아세안·중남미 등지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마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대미국 수출 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간 합종연횡도 나타난다. 첨단기술·디자인 개발을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 60%가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는 이런 세계적인 가치사슬 재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선제적 조치를 통한 해외 진출 강화, 글로벌 기업과의 연구개발 협업, 우리 기업의 가치사슬 생태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한국은 그동안 GVC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수출 증대 효과를 누렸지만 세계적 자국 중심주의, 지역거점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며 위기·기회의 기로에 서있다"며 "코트라도 우리 기업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국가 무역·투자 진흥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준 기자 ysw@



“유턴기업 성과 미지수 현실 반영한 정책 필요”

자국 내 공급망 확보 중요성 확인
지난 2013년 유턴기업 지원 법 도입
유턴기업 사업 지속성 성과 부족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필요성이 높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6일 내놓은 '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3년 유턴법 도입 이후 우리나라 기업 유턴의 성과는 지속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유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며 주요국은 자국 내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요국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급망 확보의 주요 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의 리쇼어링 방향은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주력했다. 또 전략

산업과 의료분야의 독자적 공급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흐름에 우리나라도 2013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8월 기준 80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됐다. 총투자규모는 1조 1103억원과 총고용 2967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유턴은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견기업의 유턴이 2019년 3개사에서 2020년 6개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유턴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추세적 확장성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턴 기업의 사업 지속성 역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한국 현실을 반영한 유턴 정책 도입을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리쇼어링 성과에 대한 비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고려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중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업종별 차등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확보 및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위기술산업을 핵심 유턴 업종으로 선정하지는 것이다. /백지연 기자 wldius0248@

연기 혹은 취소... 잇단 전시회 일정변동에 업계 '한숨'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당초 9월로 예정됐던 대규모 인공지능(AI) 전시회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부산과 코엑스에서 개최되기로 했던 AI 전시회들이 연기되거나 일부 행사만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매년 개최되는 최대 규모 AI 전시회인 '2020 국제인공지능대전(AI 엑스포 코리아)'은 당초 코엑스에서 23~2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27~29일로 일정이 연기됐다.

특히, 이 전시회는 당초 5월 19일에서 2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번째 연기가 되어서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방문객들이 AI 반려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AI EXPO KOREA 사무국

또 부산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규모 AI 전시회인 'AI 코리아 2020'을 17일에서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올해 행사는 취소하고 내년엔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4개의 콘퍼런스는 오프라인 행사를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해 당초 일정대로 17일에서 1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백지연 기자 echo@